

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2. 11. 30.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진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가. 의안번호: 1844
- 나. 발 의 자: 정교진 의원(찬성의원 8명)
- 다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2. 제안이유

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·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라. 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(안 제5조)
- 마.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- 아.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
- 나. 협조부서: 여성가족과
- 다. 예산조치: 성동구청장과 협의
- 라. 입법예고(2022.11.11.~2022.11.16.)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·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
- 본 조례안 제정 목적과 용어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부터 제14조의3¹⁾까지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²⁾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를 폭넓게 규정

- 1)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2) 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-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○ 구청장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3조)

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시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○ 시행계획의 수립 등 (안 제4조)

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,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교육, 홍보등 적절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

○ 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 (안 제5조)

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담, 의료, 법률 및 사후 서비스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고,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(안 제6조)

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○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
필요시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

○ 비밀준수의 의무 (안 제8조)

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과거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○ ‘디지털 성범죄’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, 비동의유포, 유포협박, 불법 합성 등이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

- 불법촬영: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
- 유포: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
- 소비: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, 시청하는 행위
- 디지털 그루밍: 온라인 채팅·모바일 메신저·SNS를 통해 아동·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,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

○ 2020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근절되지 못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지능화되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○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 접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2020년 6,322건에서 2021년 1만 1,568건으로 80%이상 증가된 걸로 나오고 경찰청이 집계한 통신매체이용 음란범죄는 2020년 2,047건에서 2021년 5,067건으로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- 특히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더 익숙하고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높기에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며 더군다나 코로나19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한 것이 디지털 성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
- 디지털 매체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제와 유포가 용이하여 전파가 빨라 피해자에게 회복이 힘든 피해를 입히는데, 이를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및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모니터링 및 수사법률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에 의의가 있습니다.
- 아울러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 수는 여성이 월등히 많아 관련 지원책은 아무래도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하여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나는 등 그 수가 적지 않은 만큼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여 역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원책을 균형 있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타 자치구 입법 사례³⁾를 살펴보면,
 - 서울에서는 市를 포함 4개 자치구(강동, 노원, 도봉, 양천)에서 시행하고 있으며
 - 전국적으로는 교육청을 포함하고 내용 중 “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방지” 등을 포함하여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차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는바,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 사전 예방 및 사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지원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3) 법령정보센터에서 “디지털 성범죄”로 검색한 결과